

Newsletter

April 25, 2025

Contents

Audit

- 상장예정 (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 분식회계 행위, 최대 10억원 벌금으로 엄정 처벌
-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Accounting

-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사 유의사항 안내
- 2025년 회계 이렇게 바뀐다
- 2025년 3월 K-IFRS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 중소기업 상장사, XBRL 주석 재무공시 연락처 지원

Tax

-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상반기 경기실사지수(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1.6% 전망



상장예정(IPO) 법인 재무제표 심사 강화

2025년부터 상장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강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상장 직후 주가 하락 등 문제에 대응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분식 위험도 기반 신규 표본선정 기준 도입
- 금융감독원: 심사 대상 자산 기준을 1조원 이상 →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
이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은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 기업을 심사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사업보고서 비제출기업 중 5천억 미만 기업을 심사하는 것으로 조정
- 중대한 회계위반 시 감리 전환, 상장심사 기각 사유 가능

[더 알아보기 →](#)

분식회계 행위, 최대 10억원 벌금으로 엄정 처벌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5.3.13)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억원의 벌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에는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징역형 외 처벌 수단이 없어, 형벌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24.7)에 따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벌금 상한 10억원이 신설됨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안 중 가장 높은 상한액으로 결정

이번 개정으로 회계 부정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실질적인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게 되어, 기업은 강화된 제재 기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2025년도 금융감독원 회계심사, 감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2025년 회계심사·감리업무 방향을 발표하며,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리체계 구축을 예고했습니다.

-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통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 (감리절차 강화)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 및 내부심의절차 강화
 - (상장 전후 감독 강화) IPO예정기업 및 상장 직후 기업에 대한 심사강화
 - (한계기업 감시 강화)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심사확대
-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심사·감리 실효성 제고
 - (시스템화) 감리 쏠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세대 감리시스템 구축
 - (제재기준 개선) 다수 회계연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추진
 - (시의성 반영)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한 '26년 테마심사 항목 선정·발표
-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을 통한 회계감독 선진화
 - (감리방식 개편) 감사인별 시장영향력 등을 반영하여 감리주기 차등화
 - (조치 합리화) 등록요건,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 개편 추진
 - (내부통제 감독강화) 통합관리 점검 지속 및 지배기구 감독강화 방안 검토

[더 알아보기 →](#)

Accounting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회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 반복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기본 의무 이행을 다시 한 강조했습니다.

■ 2023년 기준 위반 사례 15건 발생

- 제도 미구축, 운영실태 미보고 등의 위반 사례 발생
- 회사 및 대표이사에 최대 1,200만원 과태료 부과

■ 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상장법인:**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
 - **비상장법인:** 자산 5,000억원 이상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금융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은 1,000억원 이상)

- ※ 2024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적용
-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연결 내부회계도 역시 감사대상으로 포함

[더 알아보기 →](#)

2025년 회계 이렇게 바뀐다

2025년부터 적용되거나 예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IFRS 제1021호·1101호 개정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
 - 외화 표시 항목의 환율 적용 시, 교환이 제한된 통화의 경우 현물환율을 추정하여 적용해야 하며, 관련 정보 공시 의무도 강화됨
 - 교환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교환 소요기간·시장·획득 목적 등 고려
-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안)
 - 손익계산서 및 주석의 구성을 재정의하고, '영업손익'을 잔여 범주로 정의
 - 실무상 영업손익 정의 변경에 대한 우려 존재하나, 국제적으로 산업별,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적용 일관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수렴 증으로, 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적용 예상

[더 알아보기\(공인회계사 저널 2025.02호\) →](#)

2025년 3월 K-IFRS 신속 질의회신 요약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K-IFRS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회신한 신속 질의회신 12건의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 차입원가 예시의 선택적 포함 여부
- 사용량 기준으로 정산되는 리스계약의 회계처리
-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 선지급한 금액의 계정 분류
- 전환사채의 유동성 위험 공시
- 누적적 배당액에 대한 회계처리
- 계약 해지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회계처리
- 관계기업 지분 일부 매각 시 영업권 회계처리
-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감액배당 회계처리
-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총액
-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의 주식 양수도 시 양수자의 회계처리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중소형 상장사, XBRL 주식 재무공시 연착륙 지원

금융감독원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신규 적용되는 XBRL 주식 재무공시 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상장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주기와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자산 5천억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식 상세 공시 제출 시기를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시기와 일치 시키기 위해 반기별(연 2회)로 일시 완화, 분기보고서는 2028년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 태깅(Block Tagging) 방식 허용
- 시행 시기는 자산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분산 적용
 - 2천억 이상 ~ 5천억 미만: '26년 3월(25년 사업보고서) 제출 - 기존과 동일
 - 1천억 이상 ~ 2천억 미만: '27년 3월(26년 사업보고서) 제출 - 1년 유예
 - 1천억 미만: '28년 3월(27년 사업보고서) 제출 - 2년 유예
- 상장사 및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시범 제출 피드백, 작성 가이드 제공, 교육 강화 등 지원책 병행

[더 알아보기 →](#)

Tax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총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25.1.17~2.5)를 완료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사항의 적용기준, 요건,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 기업 실무자와 세무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조세상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필요

[더 알아보기 →](#)

세법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월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등 총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
 -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 세액공제율 5%p 상향
 - 대형·중견기업: 15% → 20%, 중소기업: 25% → 30%
-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년까지 연장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유예 연장
 - 적용기한: 2026.12.31까지 유예
 -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024년 개정 세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은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진행 중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D·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명확화
 -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 신설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 불이행 기간, 평균 수입금액 기준의 산식 적용
- 특정법인과 자본거래 시 증여의제 확대
 - 불균등 증자·감자, 현물출자, 합병, 초과배당 등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 포함
 - 각 유형별 이익 계산 방법 규정

※ 입법예고: 3.21.~4.30. / 공포 및 시행: 2025년 5월 예정

[더 알아보기 →](#)

Insight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상반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025년 1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분기 BSI(현황): 60 (전기 대비 하락, 경기악화 시사)
- 2분기 BSI(전망): 74 (다소 회복 기대, 여전히 부정적)
-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반도체 산업 둔화 등
- 산업별 현황 BSI
 - 조선업(145)만 기준선(100) 상회, 대부분 산업 부진 지속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원자재 가격, 통화정책, 기술 블록화 등

[더 알아보기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1.6% 전망 경제 전망

KDI는 최근 발표에서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6%로 하향 조정하며,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실질 GDP 성장률: 1.6% (2024년 2.0% → 하향 조정)
 - 민간소비 증가율: 1.6% (↑), 설비투자: 2.0% (→), 건설투자: -1.2% (↓)
 - 수출 증가율: 1.8% (2024년 6.9% → 크게 둔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
 - 취업자 수 증가: 약 10만명, 실업률: 2.9%
-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 통상정책 변화, 미·중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경기심리 위축 장기화 가능성

※ 반도체 중심 회복세는 제한적, 경제 전반의 심리 회복과 정책 안정성 확보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 알아보기 →](#)

Contact us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